

벨기에와 에너지 협력 논의... EU와 경제·안보 협력 공고히

李, 9박10일 유럽순방 마쳐 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격상 교황청서 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한국과 유럽 양자관계 심화 넘어 공동가치 중심 해법 모색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9박10일 간의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을 통해 협력 확장 및 중동·공급망 등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공문화하고 유럽 연합(EU)과의 경제·안보 협력들을 공고히했다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 기간 벨기에·EU·이탈리아 정상 및 레오 14세 교황과 순차적으로 만나 경제·안보·국제평화 관련 협력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또 G7에 선 국제연대 및 AI 시대 과제 등을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바르트 웨브흐 총리와 벨기에 정상 회담에선 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강화하고, 양국이 상호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U의 철강·탄소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EU 측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EU 측이 브뤼셀 방문을 초청해왔다. 최근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EU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계획을 채택했다. 현 정부 들어 G7 국가와 관계 격상은 지난 4월에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

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탈리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최고등급 훈장인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우리 정상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바티칸에서는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 지지를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레오 14세의 방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벨기에·EU·이탈리아 순방에 대해 "이번 유럽순방은 현재의 문제와 함께 미래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이 유럽과 양자 관계 심화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G7에 2년 연속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제연대와 공급망 협력, AI 시대 대응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독일·캐나다·캐나다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나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년 연속 G7에 초청받은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AI, 개발, 보건 등 글로벌 의제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며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활용해 아시아 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도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국조특위,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 부족사태 발생 경우·사후조치 등 조사 민주 9명, 국힘 7명 등 총 18명 구성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서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희진 의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거관리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18명이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정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다.

선거권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10월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90분 대화' 李-트럼프 韓美 '후속협약'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한미 간 후속협약이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이 대통령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양 정상의 자리 배치가 옆자리인 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17일 엑스(X·옛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소식을 전하며 서명용 펜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기부 동반 골프 약속을 했다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장동혁 사퇴론에 "가을 전 임기 종료"

野 지도부, 사퇴론 두고 또 공개충돌 정점식 "李 정권 폭주 견제 장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두고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개 충돌이 일어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번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장 대표는 선거위 개혁과 특검법 추진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버티는 중이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지난 월요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한 걸로 안다"며 사비로 태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출장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기간 중 지도부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비용으로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 발언 후 "우리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

는 게 몹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우 최고위원을 겨냥해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당 지도부의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도 우 최고위원은 선거위 사태 마무리 이후, 가을 전 임기 종료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우 최고위원에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청년 정치인도 당 내부 비판에 대한 목소

리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모습보다는 정말 묵숨 걸고 투쟁해야 하는 특검법 수용을 위한 노력, 선거위 개혁 등에 대한 목소리를 먼저 내준다면 국민과 당원들에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참정권 침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달고(퇴진) 해주시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최고위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발언에 대해 "(장 대표가) 답을 주지는 않았다"며 "선거위 사태와 싸우고 그다음에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